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

2022/05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이서희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07)

Contents

이슈포커스

흑해와 터키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2

국제법원

국제사법재판소(ICJ) 5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카리브해에서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 위반 주장' 분쟁 판결

국제기구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11

칠레, 칠레령 남극 서쪽 대륙붕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에콰도르, 카네기 해령 남쪽 대륙붕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모리셔스, 차고스제도 북쪽 대륙붕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미크로네시아, 아프섬 북쪽 대륙붕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지역별 동향

아시아 17

중국 동·남중국해 군사활동 강화

일본 동해 가스전, 30년만에 탐사 시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위한 해저터널 공사 개시
해상자위대 병력 강화

대만 대미관계 강화와 안보 위해 쿼드 가입 희망
남중국해 타이핑다오(이투 아바) 내 활주로 확장

베트남 베트남,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 요구

싱가포르 싱가포르, 유엔해양법협약 기반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개최

북아메리카 34

미국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오세아니아 37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과 오세아니아 대응
중국 정찰함, 호주 서쪽 해안 비밀 군사기지에 접근하여 정보 수집

태평양도서국 46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우려 성명서 제출

아프리카 49

기니만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전년에 비해 감소세 보여

행사안내

지난 달 행사 50

3개월 내 행사 계획 5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포커스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박영길

흑해와 터키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그로 인한 전 세계 에너지 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흑해와 터키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흑해의 지정학적 위치

흑해(Black Sea)는 지중해의 북동쪽에 있는 폐쇄해이다. 면적은 약 43.6만㎢로 서해(약 38만㎢)보다는 조금 크고 동해(약 105만㎢)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며, 최고 수심이 2,200m가 넘을 정도로 매우 깊어서 담수량이 많으며, 다뉴브강, 드네프로강, 돈강을 비롯해 20여 개의 강에서 흘러들어 오는 물을 수원으로 한다. ‘흑해’란 이름은 바닷물 색깔이 어둡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러한 흑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조지아, 터키(최근 ‘튀르키예’로 개명) 등 6개국의 연안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흑해의 북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남쪽은 거의 대부분 터키의 관할 해역이다.

흑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남중국해나 페르시아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덜 받았었지만, 사실은 세계 어느 바다보다도 국제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흑해와 그 주변에서는 9개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생하였다. 즉, 몰도바 내전, 조지아-아브하즈 전쟁, 조지아 내전, 러시아-조지아 전쟁, 두 차례의 체첸 전쟁,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두 차례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등이 있었다. 이들 전쟁들이 지역 내 분쟁으로 그친 반면,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의 대규모 침략이란 점과 특히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진영 간 대결구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구별된다.

흑해 봉쇄와 세계식량안보 위기

전쟁 발발 후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이 통제되면서 국제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로 인해 각국의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세계적 영향 중에서 에너지 안보위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계식량안보



이슈포커스

위기 문제이다. 이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과 해바라기 유 등의 생산물이 흑해를 통한 수출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의 밀 수출은 서방의 제재로 대부분 막히고,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은 러시아가 흑해 해안을 봉쇄하면서 완전히 차단되었다.

전세계 밀 생산량은 EU,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순이지만(미국 농림부, 2021-22 추정), EU, 중국 및 인도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내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출량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순으로 많다.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담당하고 이 중 우크라이나의 밀수출은 9% 정도로 전세계 밀 수출량의 비중에 비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이유이다.

EU와 유엔 등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최대항구인 오데사항을 통한 밀수출이 가능하도록 러시아가 흑해 봉쇄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먼저 서방의 자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은 대부분 북부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로 수출이 되는데, 밀수출 봉쇄로 인해 이 지역의 식량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한편, 로이드(Lloyd's)와 국제보험협회(IUA) 대표로 구성된 공동전쟁위원회(Joint War Committee)는 지난 3월 흑해의 북부와 아조프해를 고위험지역(high-risk zone)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흑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의미로, 운임료 상승과 상선의 흑해 통항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터키 해협과 터키의 절대적 영향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여러 차원에서 터키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도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회원국 만장일치를 요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 쿠르드 반군 지원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과는 별개로, 터키해협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터키의 지역 내 영향력은 사실상 절대적이다.

터키해협은 흑해를 에게해, 지중해와 연결하는 두 개의 해협, 즉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말한다. 두 해협은 모두 터키의 영토 내에 있는데, 두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터키해협은 흑해를 지중해, 대서양 및 인도양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해상교통이기 때문에, 흑해를 출입하는 모든 상선과 군함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슈포커스

수로이다.

이처럼 터키해협은 터키와 지중해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1936년 여러 국가들과 터키는 이 해협의 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해협제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garding the Regime of the Straits)을 채택하였다. 스위스 몽트뢰에서 채택되었다고 해서 흔히 ‘몽트뢰협약’이라고 불린다. 몽트뢰협약에 의하면 평시에 모든 상선은 ‘통과와 항행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군함도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통과와 항행의 자유를 누린다. 반면, 전시에는 터키가 교전 당사국인지 여부에 따라 상선과 군함의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 터키가 교전 당사국인 경우에는 흑해의 항구를 모항으로 하는 군함의 복귀를 제외하고는 통항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시에 터키가 교전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전쟁의 급박한 위험에서 위협 받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교전 당사국의 지위에서와 같이 군함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협약 제21조)

터키는 2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전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군함의 터키해협의 통항을 금지하였다. 즉, 터키는 전쟁이 아니라 ‘군사작전’이라는 당시 러시아의 주장을 배척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쟁’으로 간주하였으며, 비록 교전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터키가 급박한 위험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 이전에 16척의 러시아 군함이 터키해협을 지나 흑해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로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항구를 모항으로 하는 군함의 통과는 제외한 모든 러시아 군함과 모든 나토 소속 군함의 통과가 금지되었다. 2월 27일과 28일 사이 4척의 러시아 군함이 해협 통과를 시도했지만 터키는 이 중 3척이 흑해 내 러시아 항구를 모항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참고자료 : James Kraska, “Can Turkey Legally Close Its Straits to Russian Warships? It’s Complicated: Ankara’s hands are tied by the 1936 Montreux Convention.” in Foreign Policy (2022.3.1.); Maximilian Hess, “Welcome to the Black Sea Era of War: It has been the world’s bloodiest body of water since the Cold War—and not just because of Ukraine”, in Foreign Policy (2022.4.25.); The Guardian, “The Black Sea Blockade: mapping the impact of war in Ukraine on the World’s food supply—interactive” (2022.6.9.); 1936 Convention Regarding the Regime of the Straits(Montreux Convention)

국제사법재판소

ICJ

전문연구원 김지혜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카리브해에서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 위반 주장’ 분쟁 판결

지난 4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간 “카리브해에서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 위반 주장(*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니카라과는 2013년 11월 26일 보고타 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콜롬비아가 “2012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에 대한 ICJ 판결”에서 결정된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ICJ에 제소했다.

ICJ는 이번 사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문제를 검토했다. 최종 판결 결과 ICJ는 니카라과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ICJ는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니카라과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콜롬비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다투는 사안들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림 1. 2012년 ICJ 판결에 의해 설정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해양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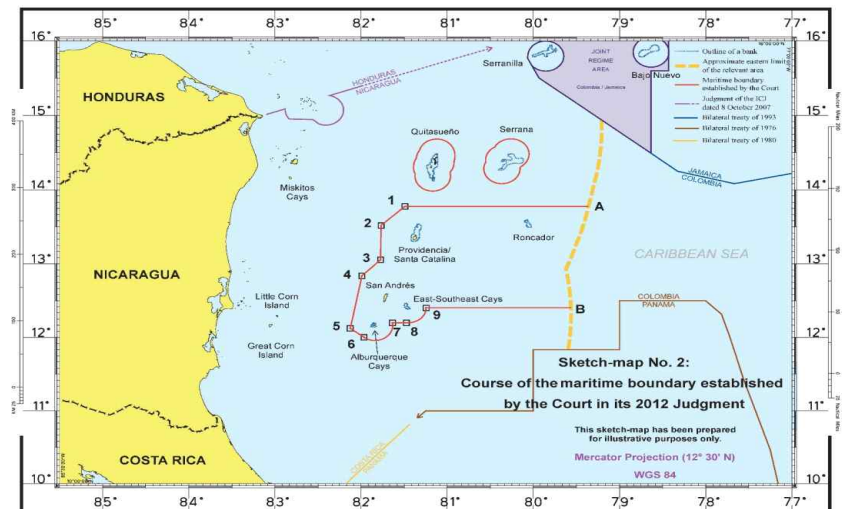


그림 출처: ICJ



국제사법재판소

ICJ

ICJ의 시간적 관할권 범위 검토

우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ICJ는 본 사건에 대해 시간적 관할권을 갖는지 판단했다. 2012년 ICJ 판결 이후 콜롬비아는 보고타 협약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ICJ가 콜롬비아에 대해 협약의 효력이 중지되는 시점인 2013년 11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ICJ는 2013년 11월 27일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니카라과의 주장이 이미 ICJ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2013년 이후 사건을 고려하는데 있어 현재 당사국 간의 사건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ICJ는 본 사건에 대한 시간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니카라과 해역에서 니카라과의 권리 침해 문제 검토

ICJ는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 관할권을 침해했는지를 검토하였다. 니카라과는 ICJ의 2012년 판결에 따라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 의무를 콜롬비아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선, 콜롬비아 군함과 항공기가 니카라과 국적 또는 허가를 받은 어선과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선박을 방해하고, 니카라과 해역에서 훈련 중인 해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국적인과 제3국 국적인에게 어업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를 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되는 일부 구역에 대해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권을 판매함으로써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인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CJ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콜롬비아는 1) 니카라과 어선과 니카라과 군함의 과학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2)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권을 허가하며 3)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보존조치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남서카리브해에서 콜롬비아의 위법 행위 주장에 대해 콜롬비아는 항해의 자유와 주권 및 주권적 권리의 고려와는 상관없이 남서카리브해 및 산 안드레스(San Andres) 제도 주거지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어업활동과 관할권을 관리할 주권적



국제사법재판소

ICJ

권리는 연안국에게 있다고 밝히며 콜롬비아의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56조, 제58조,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습국제법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과 해양과학조사를 허가했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대해 ICJ는 언급된 콜롬비아의 결의안에서 콜롬비아가 해양과학조사를 허가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어업활동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니카라과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석유탐사권 발급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해양경계선이 획정되기 전 콜롬비아가 11개 석유 채굴허가권을 내놓고 2개를 제공했으나, 이후 계약이 중단되었고, 최근까지 문제된 채굴 허가권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변론에서 니카라과가 해당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콜롬비아는 해당 석유 채굴권을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결론적으로 ICJ는 콜롬비아가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권을 판매함으로써 니카라과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인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니카라과가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콜롬비아가 설정한 “복합접속수역” 문제

콜롬비아는 2012년 ICJ 판결 직후인 2013년 공포된 콜롬비아 대통령령 1946호에 의해 서카리브해의 섬들 주변에 복합접속수역(integral contiguous zone)을 설정하였다. 이 수역은 2012년 ICJ 판결에 의해 획정된 경계선을 넘어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고 있고, 관할 대상에 안보, 마약밀매,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가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ICJ는 협약 제33조가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둘째는 콜롬비아의 복합접속수역의 일부가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하는 것이 니카라과의 권리 침해인지 여부였다. 니카라과는 2012년 판결에 따라 경계가 획정된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2013년 콜롬비아 대통령령에 의해 복합접속수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는 니카라과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CJ 먼저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서로 적용이 다른 구별되는 제도란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2012년 판결에서는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경계를 획정했을 뿐 접속수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런 이유로 ICJ는 콜롬비아의 접속수역 일부가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사법재판소

ICJ

중첩하는 것이 곧 니카라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셋째는 콜롬비아의 복합접속수역이 관습국제법과 양립하는지 여부였다. 콜롬비아는 복합접속수역에 안보(security) 등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들을 집행하는 것과 일부 수역이 기선에서 24해리를 넘어서는 것이 관습국제법상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J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가 관습국제법상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벗어나서 안보 등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24해리를 넘어서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림 2. 콜롬비아가 213년 대통령령 1946호에 의해 설정한 복합접속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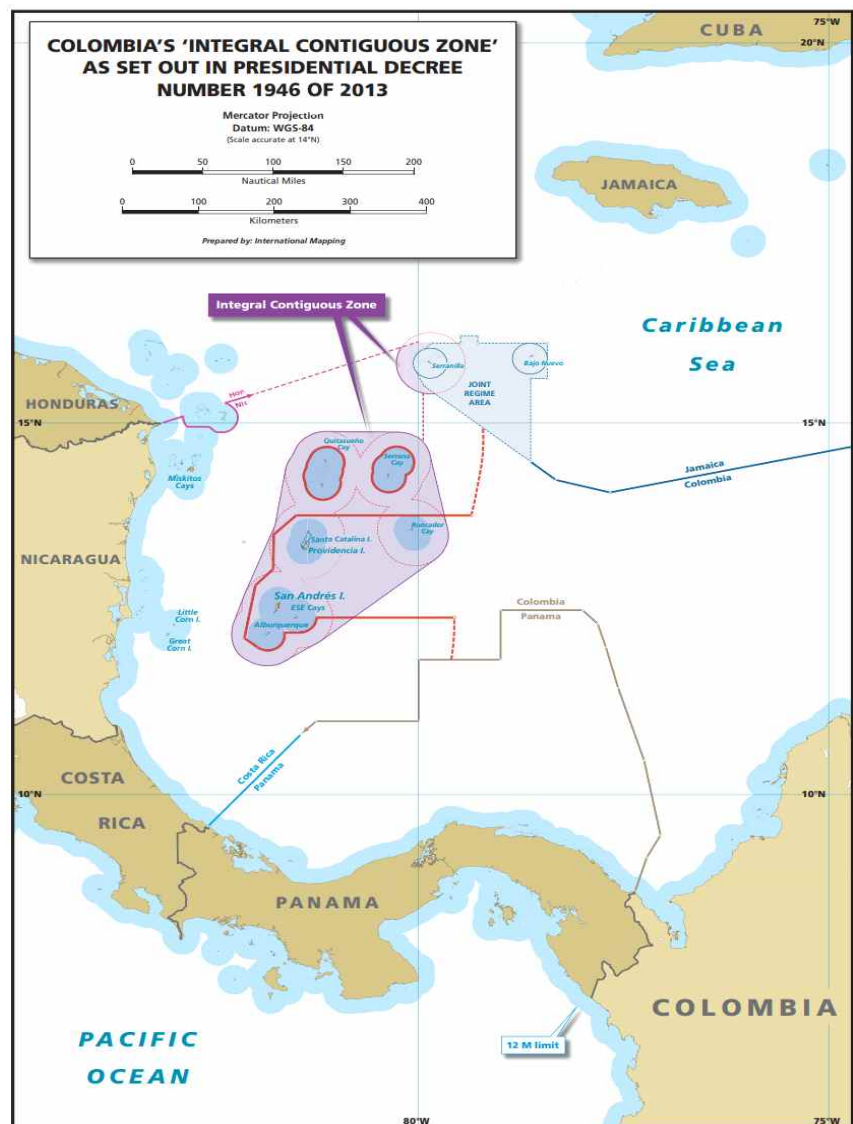


그림 출처: ICJ



국제사법재판소

ICJ

전통적 어업권의 관습국제법 성립 문제

콜롬비아는 2016년 11월 4개의 반소를 청구하였는데, ICJ는 이 중 전통적 어업권 문제 및 니카라과가 설정한 직선기선 문제 등 2개에 대해서만 반소 청구의 수리적격을 인정하였었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였다.

콜롬비아는 2012년 판결에 의한 경계획정 이후에도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습국제법상 전통적 어업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콜롬비아는 현재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되는 수역에서 산 안드레스 제도 주민들은 수백년 동안 전통적 혹은 영세한(artisanal) 어업을 해왔으며, 이는 명확히 “지역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재판에 의해 해양경계가 획정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어업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니카라과의 허가 없이 하는 어업활동은 니카라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콜롬비아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는 전통적 어업의 관습국제법 성립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ICJ의 전통적 어업권에 관한 관습국제법 성립 여부 검토는 재판에 의해 해양경계가 획정된 이후에도 전통적 어업권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ICJ는 니카라과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와 협정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 간 양자 협정 체결을 통해 니카라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위치한 어장에 대한 콜롬비아 주민들의 접근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니카라과가 설정한 직선기선 문제

니카라과는 2013년 9개의 기점을 이용해서 직선기선을 설정하였다. 콜롬비아는 이 직선기선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의 직선기선 설정을 위한 지리적 조건들, 즉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해안선 근처에 섬들이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히 벗어남으로써 협약 제7조를 위반했으며, 또한 직선기선을 통해 상당한 해역을 내수화하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인위적으로 확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먼저 기점들을 연결한 일부 기선들이 직선기선 설정을 위한 지리적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특히 ICJ는 “해안선 근처에 섬들이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상세한 고찰을 하였다. 즉, ICJ는 직선기선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섬들이 해안을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ICJ

서로 응집력 있는 무리를 이룰 만큼 가까이 있어야 하며 해안의 외곽으로 간주될 만큼 육지와 충분히 연결되어야 하는데, 니카라과의 섬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ICJ는 니카라과의 직선기선 설정으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일부가 내수화되었는데, 이는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해서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콜롬비아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권리)에 반영된 관습국제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출처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umbia)", Summary 2022/2, 21 April 2022 ; Lexology, "ICJ orders Colombia immediately to cease activities in Nicaraguan EEZ waters".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전문연구원 김주형

칠레, 칠레령 남극 서쪽 대륙붕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칠레는 지난 2월 말 칠레령 남극(Chilean Antarctic Territory)의 서쪽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을 위한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였다. 제출 정보에 의하면 칠레는 벨링스하우젠 해와 새클턴 단열대 지역에서 영해기선으로부터 각각 326해리와 267해리 떨어진 지점까지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주장했다.

칠레의 정보제출은 남극을 상대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한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남극은 1959년 채택된 남극조약과 1972년 남극 물개보존협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등의 조약 체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남극조약은 남극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성격의 조치를 금지하며, 과학적 연구의 자유와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한국은 1986년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남극탐사에 나섰던 7개국은 부채꼴 모양의 선형이론을 기초로 남극의 영토주권을 주장하였다. 남극조약은 이러한 영토주권 또는 그에 기초한 청구권 주장을 동결시켰다. 즉, 남극에 대한 기존 영토주권 주장의 포기를 요구하지도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조약의 당사국은 남극 영토주권에 대한 새로운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남극조약 제4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 (b) 어느 체약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의 그 국가의 활동 또는 그 국민의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 (c) 남극지역에서의 타국의 영토주권,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
2. 이 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 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칠레는 칠레령 남극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가 아르헨티나, 영국, 북아일랜드의 관할권 주장과 중첩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남극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했던 7개 국가는 2004년 CLCS에 남극지역에 대한 정보 제출이 있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아직까지 다른 국가들이 칠레의 CLCS 정보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칠레의 남극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 신청과 칠레령 남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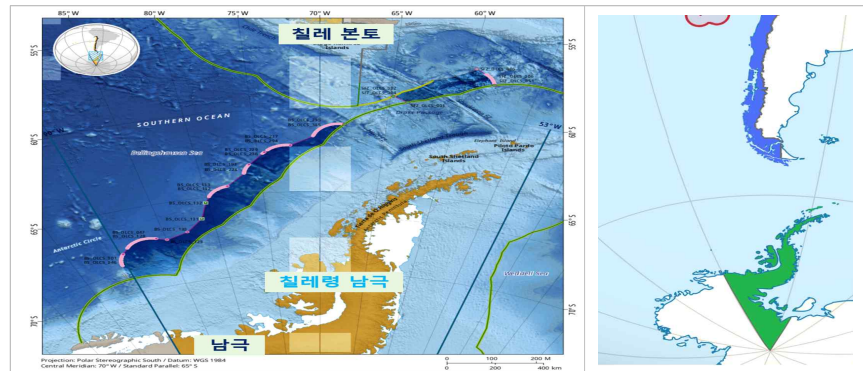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좌), 위키피디아(우)

칠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부속서 II의 제4조와 함께, 협약 76조 8항에 따라 이 부분 정보를 제출했다. 이번 제출 정보에서 칠레는 벨링스하우젠 해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26해리, 새클턴 단열대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67해리 떨어진 지점까지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지질학적 및 물리학적 정보와 형태학적 및 해수학적 정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3항 및 제4항 (b)에 근거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는 칠레령 남극의 서쪽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76조 제4항 (a)항 (i)에 따라 퇴적층 두께가 1%인 지점 중 대륙사면의 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지점과, (ii)에 따라 대륙사면의 끝에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지점을 이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출처 : UN CLCS 홈페이지.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sion by Republic of Chile.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에콰도르, 카네기 해령 남쪽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에콰도르는 지난 3월 1일 태평양의 카네기 해령 남쪽의 대륙붕 한계를 확장하기 위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였다. 제출 정보는 에콰도르 본토와 갈라파고스 제도 사이에 걸쳐 있는 해령을 기초로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확장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에콰도르의 첫 정보제출은 2020년 12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해분에 대해 공동 정보를 제출한 것이었다. 두 번째 정보 제출은 2021년 9월 카네기 해령 남쪽, 코코스 해령 북쪽, 코롱 해령 등 세 지역에 대해 제출한 예비 정보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카네기 해령 남쪽에 대한 정보 제출에 이어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출될 예정이다.

에콰도르가 주장한 대륙붕 외측 한계선은 페루 배타적 경제수역의 끝부분에서 멈추고 있지만, 에콰도르와 페루가 2011년 획정한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면 페루 측으로 넘어와 있다. 따라서 페루가 아직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CLCS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페루 측 대륙붕의 지질학적 구조와 향후 정책에 따라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림 4. 에콰도르의 태평양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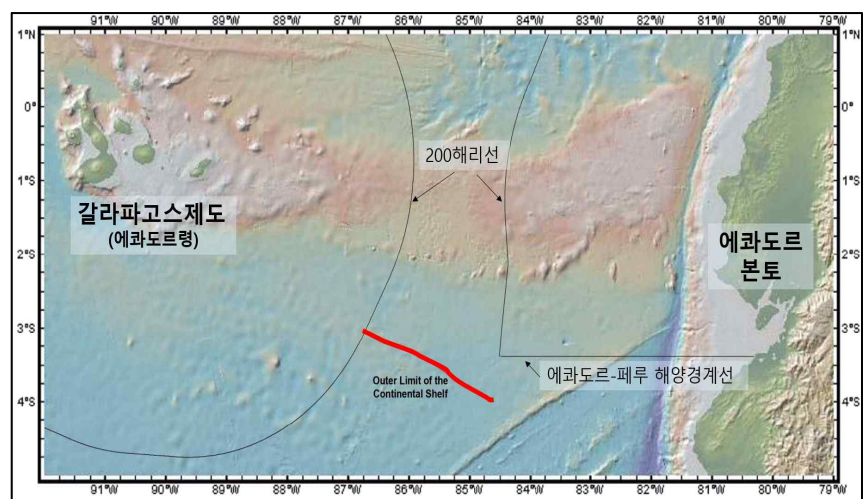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출처 : UN CLCS 홈페이지.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Ecuador.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모리셔스, 차고스제도 북쪽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

모리셔스는 4월 12일 차고스제도 북쪽의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을 위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였다. 이번 부분 정보 제출에서 모리셔스는 차고스 제도 북쪽의 페로스 반호스, 살로몬 섬, 블렌하임 리프에서부터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붕의 외측 한계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즉, 페로스 반호스 섬과 블렌하임 리프 최외측 지점과 만나는 군도 기준선에서부터 200해리 이원까지 대륙붕의 외측 한계 확대를 주장했는데, 그 면적은 약 23,400km²이다.

그림 5. 모리셔스의 차고스제도 북쪽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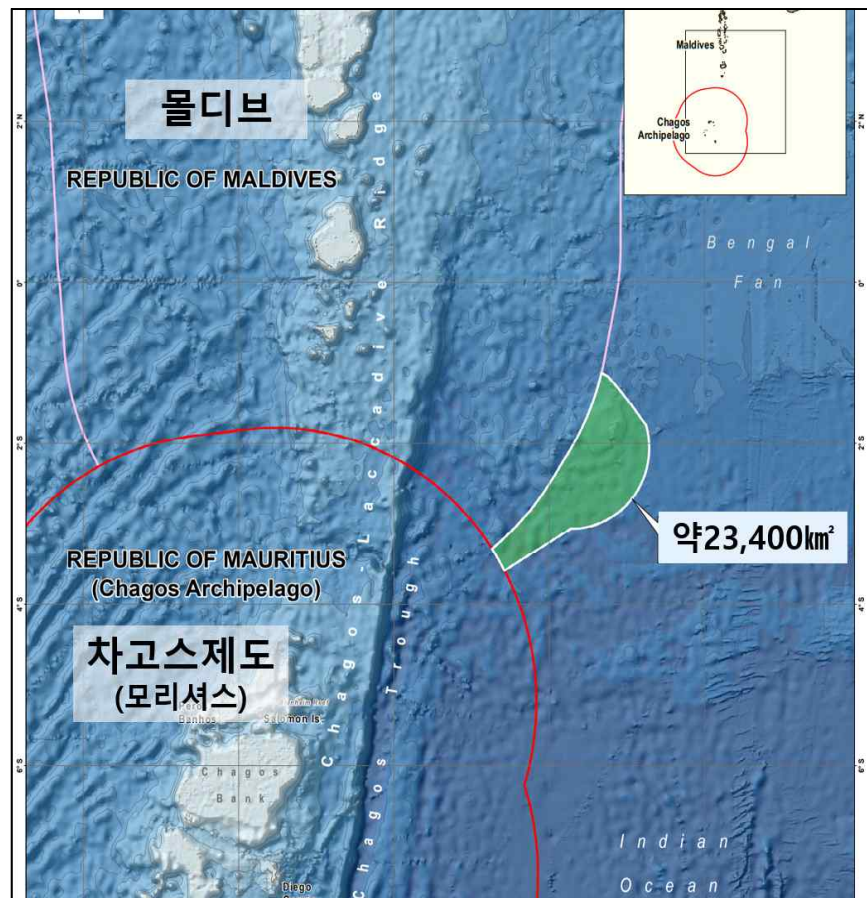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모리셔스의 정보 제출은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첫째는 차고스 제도의 영토주권 문제가 종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동쪽에 있는 인도양의 조그만 섬나라인 모리셔스가 1968년 영국의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로부터 독립하기 3년 전인 1965년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모리셔스로부터 분리하여 통치해 왔었다. 2019년 ICJ는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영국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차고스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놓았다. 2019년 유엔총회는 차고스제도가 모리셔스 영토의 완전한 일부를 이룬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모리셔스는 CLCS에 제출된 정보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국제소송 그리고 유엔총회 결의 등을 인용하면서 차고스제도에 대한 주권이 모리셔스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는 몰디브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이다. 모리셔스는 CLCS 제출 정보에서 몰디브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2019년 두 국가는 합의하여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모리셔스가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출처 : UN CLCS 홈페이지,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sion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미크로네시아, 아프섬 북쪽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부분 정보 제출

태평양의 소도서국인 미크로네시아는 4월 22일 아프섬 북쪽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였다. 2009년 5월, 온통 자바 고원에 대해 미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연방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공동으로 CLCS에 대륙붕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미크로네시아의 아프 제도 북부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부분 정보 제출은 이 공동 제출 정보의 후속 조치이다.

따라서 미크로네시아는 이번 정보 제출로 팔라우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해양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미 팔라우는 아프 제도의 북쪽과 중첩되는 규슈 해령까지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크로네시아는 자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확장 정보 제출에 대해 팔라우에 통보하고, 2019년 10월 팔라우와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CLCS에 정보를 제출하는데 팔라우는 이의가 없으며, 이 정보에 대한 검토는 향후 해양경계획정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합의를 했다.

한편, 미크로네시아와 팔라우와의 사이에서 중첩된 EEZ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 간 해양경계조약을 체결하여 경계를 획정한 바 있다.

그림 6. 미크로네시아가 제출한 아프섬 북쪽 대륙붕 외측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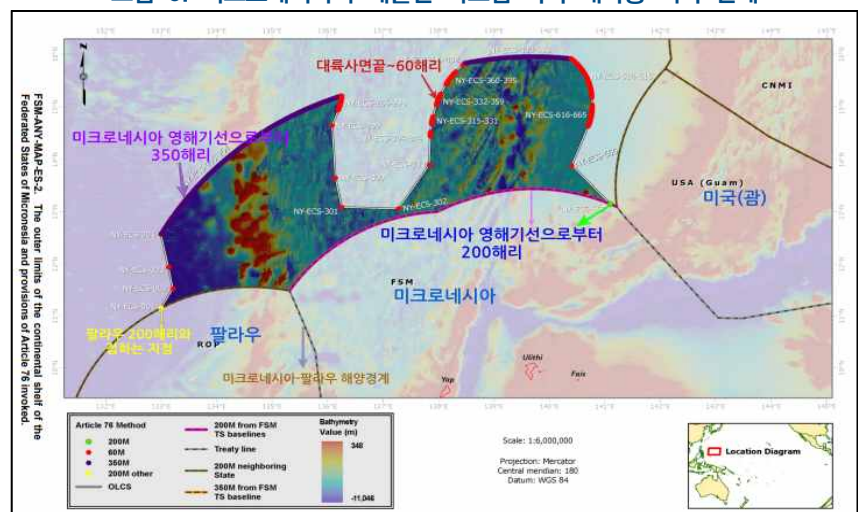


그림 출처: CLCS

출처 : UN CLCS 홈페이지,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sion by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동·남중국해 군사활동 강화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 대만, 일본이 긴장 태세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최신예 전투기, 쟈-20(殲-20, 영어명 Chengdu J-20)을 동원해 동·남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상시화하고 있다. 쟈-20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2017년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 양안(중국-대만) 및 미·중 관계가 악화한데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최근에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특히 미국 F-35와 근접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케네스 윌즈바흐(Kenneth S. Wilsbach)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국 F-35 스텔스기가 동중국해 상공 근거리에서 중국 쟈-20과 조우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측의 비행이 상당히 전문적이었고 지휘·통제 능력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쟈-20의 동·남중국해 정찰 활동을 시인했다. 중국 항공산업기울검사감독팀의 런위쿤(任玉琨) 팀장은 쟈-20이 상시적으로 동·남중국해 지역을 정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실탄은 장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림 7. 미국과 중국의 스텔스기, F35와 쟈-20



그림 출처: Defence Aviation

이 밖에 중국은 오키나와 및 대만해협 주변에 항공모함을 출격시키는 등 해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은 5월 1일부터

아시아
중국

9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사상 최대의 항공모함 편대 훈련을 시행하고,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 정박한 랴오닝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100여 차례 이륙시키는 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8. 중국 1호 항공모함 랴오닝호



그림 출처: 인민일보(人民日報)

그림 9. 중국 랴오닝함 편대 훈련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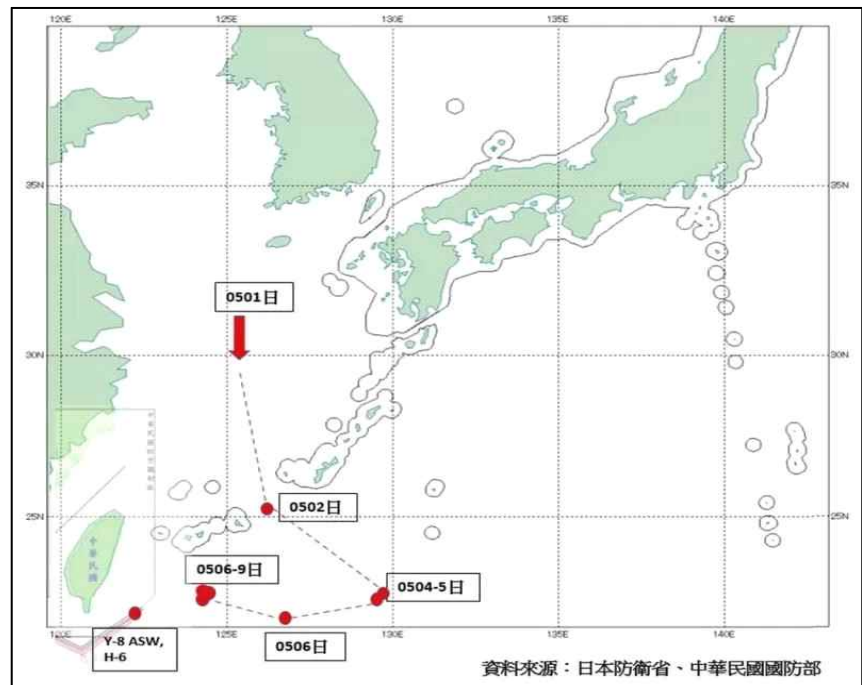


그림 출처: 일본 방위성.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아시아 중국

랴오닝함뿐만 아니라 다른 군함 8척과 편대 훈련도 진행했다. 이에 5월 2일부터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사이로 중국 군함들이 남하했으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 주변에 정박해 훈련을 진행했다. 항공모함 편성 훈련에 참여한 8척의 군함은 우루무치호(烏魯木齊號), 청두호(成都號), 055형 미사일 구축함 난창호(南昌號), 052D형 미사일 구축함 시닝호(西寧號), 종합 보급선인 후룬후호(呼倫湖號), 052C형 미사일 구축함 정저우호(鄭州號), 054A형 호위함 상탄호(湘潭號)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해군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즈모 구축함을 파견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 루즈벨트호 또한 당시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해로 방향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5월 5일 홈페이지에서 ‘미국-대만 관계 개황’ 자료를 개정해 이목을 끌었는데, 기존에 있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고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1] 中華民國國防部(중화민국국방부) [2] 中國時報(중국시보) [3] 大陸國防部 : 遼寧艦遠航是常態(중국 국방부: 랴오닝함 장거리 항해 상시화), 2021년4월30일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동해 가스전, 30년 만에 탐사 시작

지난 5월 5일, 일본의 국제석유개발회사(INPEX)는 시마네현으로부터 약 130km, 야마구치현으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해역의 수심 240m인 지점에서 매장량과 해저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천연가스 시굴 조사를 시작했다. 탐사에 드는 사업비는 330억엔(약 3,150억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을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공사(JOGMEC)가 출자한다. 이번 조사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상업화가 가능한 매장량으로 파악될 경우, 2032년경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 신규 해양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은 니가타현 이와후네 오키 석유가스전에서 1990년에 생산한 이래 30년 만이다.

그림 10. 일본이 탐사 중인 동해 가스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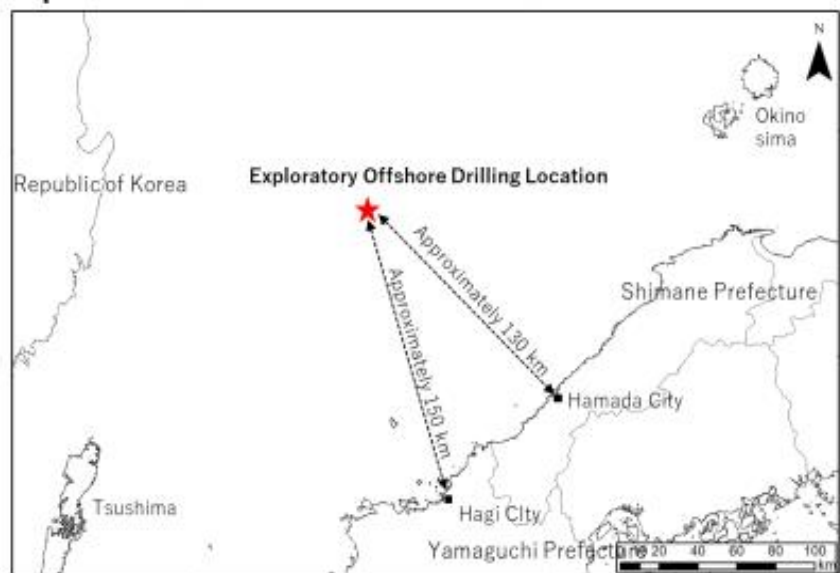


그림 출처: INPEX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구역에 최대 약 3,000만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알려진 일본 내 매장량의 약 1.4배의 규모이다. 일본이 화력발전이나 도시가스 등에 이용하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호주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도 전체 약 9%를 차지한다. 일본



아시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 차원에서 국내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INPEX는 일본 내 최대 자원개발회사로, 주력사업인 호주 LNG프로젝트인 '익시스'에 참가하며, 그 연간 생산량 중 일본 내 수입량이 10%에 달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니가타 외 홋카이도, 지바, 아키타, 미야자키 등 육상 지역을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매우 한정적이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탐사 지역은 1974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 협정에 따른 대륙붕 경계의 일본 측 수역에 속한다. 하지만 해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은 경계선에 관계없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탐사가 한국 측의 관심을 모은다.

출처 : [1] 요미우리 신문, 2022년 5월 9일, 国内の海洋ガス田、30年ぶり開発なるか… 島根・山口沖で試掘調査開始. [2] 니혼게이자이 신문, 2022년 5월 9일, INPEXが 海洋ガス田の試掘開始・国内30年以上ぶり. [3] INPEX 홈페이지, 2022년 5월 6일, INPEX Commences Exploratory Drilling Offshore Shimane, Yamaguchi Prefectures in Japan.



아시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 개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누적되고 있는 원전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5월 5일, 연안해역 약 1km 지점에 해저터널 배출구를 만들기 위한 굴착 공사를 시작했으며 7월 초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1.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 굴착공사를 위한 준설선



그림 출처: 요미우리 신문

이번 공사는 4개의 부표를 설치해 공사구역을 구분하고 준설선 위의 크레인에서 굴삭용 버킷을 바다 속으로 내려 암반을 굴착한다. 10m 이상 굴착 할 예정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토사는 회수해 전용선에 실어 발전소 부지 내로 운반한다. 그리고 주변 해수와 토사는 방사성 세슘 농도를 측정해,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을 정지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3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해양 방류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5월 중 심사 서안을 마련하고 여름쯤 정식으로 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다. 작년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해 해상 방류할 것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은 국가 배출 기준을 상회하는 농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대량의 바닷물로 그 농도를 배출 기준의 1/40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일본

도쿄전력에 따르면 현재 제1원전 부지 내 보관용 탱크(1061기)에는 처리가 된 오염수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오염수 등이 약 129만 2,700톤 보관되어 있다. 처리가 완료된 오염수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약 41만 800톤이다.

출처 : [1] 요미우리 신문, 2022년 5월 5일, 「処理水」海洋放出に向け、海底トンネル掘削開始…福島第一原発沖合1キロで. [2] 후쿠시마민유 방송, 2022년 3월 2일, 海底トンネル新設、沖合1キロからの放出計画.



아시아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강화

해상자위대 기지 연료 수송용 유조선 첫 취역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체 병력 강화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상자위대는 약 57억엔(약 5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유조선 2척을 건조해 모두 쿠레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 중 한 척인 「YOT01」이 4월 22일 히로시마현 쿠레 기지에 취역하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초로 유조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조선은 14인승으로 길이 105m, 기준배수량은 4,900톤이며 최대 약 6,000톤의 연료를 운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 유조선이 연료 수송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이 유조선이 일본 내 정유소에서부터 태평양 이오지마 기지 포함 해상자위대 각 기지에 연료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조 중인 1척도 7월 취역할 예정이다.

그림 12. 해상자위대 첫 유조선 「YOT01」



그림 출처: 요미우리 신문

해상자위대 신형 호위함 도입

4월 28일에는 해상자위대의 신형 호위함인 모가미호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해상자위대에 인도되었다. 모가미 호는 해상자위대의 첫 신형 호위함이며 길이 133m, 기준배수량은 3,900톤으로 통상적인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다. 이렇게 선체 규모를 축소해 건조 비용을 줄여 경제성을 달성하고, 승조원은 기존 호위함의 절반 수준인 90여 명으로 줄여 만성적인 인력



아시아 일본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모가미호는 다목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는데 지금까지 기존 호위함이 담당한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 임무와 함께, 소해함이 수행한 해중 기뢰 제거 기능도 겸비했다. 흘수는 4.7m로 수심이 비교적 얕은 해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두 번째 호위함인 쿠마노호와 비슷한 시기에 기공되었으며, 초기 경비를 포함한 2척의 건조비는 1,055억엔이다.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향후 이런 호위함을 22척 보유할 계획이다.

취역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마코토 오니키 방위부대신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어 평소 경계감시, 유사시 대잠수함전, 대공전, 대수상전 외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해진 첫 최신에 호위함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림 13. 해상자위대 신형호위함 모가미호



그림 출처: 아사히 신문

센카쿠 열도 주변 경비 강화 위해 새 순시선 미야코호 배치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미야코지마 해상 보안부의 12번째 순시선인 미야코 호가 배치되었다. 미야코 호는 대형 순시선으로 2020년부터 취역했으며 길이 120m, 폭 14m이며, 후방 갑판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영해 경비 목적으로 40mm 기관총 2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영해 경비뿐만 아니라 해난 구조 등 폭넓은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일 공동 해상 연합훈련 실시

지난 4월 8~17일, 일본 육해공 모든 자위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아시아 일본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동중국해와 동해상에서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이나즈마”가 미 항모와 공동 순항하는 것과 동시에, 동해에서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콩고함”과 미 해군 함정과의 탄도 미사일 정보 공유 훈련, 동중국해에서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가 참가한 대함 공격 훈련, 육상 자위대 헬리콥터의 미 항모 발착함 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번 미일 공동훈련은 일본의 방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이 평소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 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비해 미일동맹의 억제력·대처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림 14. 동해상 미일 해상연합훈련 장면



그림 출처: CNN.co.jp

해상자위대 원양 훈련 항해 실시

지난 4월 24일, 가나가와 요코스카항에서 해상 자위대 훈련함 “카시마호”와 “시마카제호”가 원양 훈련 항해를 떠났다. 이번 연습 항해는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약 51,000km를 항행하며, 동티모르, 스리랑카, 지부티, 영국, 프랑스, 파나마, 미국 등 7개국 총 8곳에 기항하고 8월 22일 귀항한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각국 방역 정책으로 2020년도에는 각 국 방문이 중지되었다가 올해 재개되었다.

출처 : [1] 아사히 신문, 2022년 4월 23일, 海上自衛隊の油槽船が全国初配備、製油所から燃料輸送 呉基地. [2] 아사히 신문, 2022년 4월 29일, 海自の最新型護衛艦の1番艦「もがみ」が就役. [3] 류큐방송, 2022년 4월 28일, 領海警備を強化 大型巡視船「みやこ」配備 沖縄. [4]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2022년 4월 19일. 米空母打撃群との共同訓練の実施について. [5] CNN 일본, 2022년 4월 28일. 日米共同訓練に対抗措置の脅し、ロシアは「神経過敏な状態」と専門家. [6] 산케이신문, 2022년 4월 24일, 練習艦が遠洋航海に出発 3年ぶり出発式.



아시아

대만

전문연구원 정현욱

대미관계 강화와 안보 위해 쿼드 가입 희망

대만 라이칭더(賴清德) 부통령은 지난 3월 2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특사단과 만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에 가입해 지역 안보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안보 협의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라이칭더 부통령은 대만 여당인 민진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로, 이날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 추귀정(邱國正) 국방부장 등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의 이번 대만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만의 안보 불안이 급속히 커진 가운데 이뤄져 더욱 관심을 끌었다. 특사단의 일원이었던 마이크 물런(Mike Mullen) 미국 전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미국의 과거 관행을 재고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미국 역시 상당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쿼드 가입 희망 의견을 본국 정부에 전달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림 15. 미국 마이크 물런 전 합참의장과 라이칭더 부통령



그림 출처: Taipei Times



아시아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회담 전 미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주목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국제 및 지역 안보와 관련해 대만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대만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에 대해 불편한 모습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이 대만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수호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답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는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 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근거로 무기 지원을 보장하기로 규정한 채 직접적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과 달라진 태도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미국이 전략 경쟁국인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출처 : 中華民國總統府(중화민국(대만) 총통부 홈페이지), “20220302 總統接見「美國總統拜登指派之跨黨派資深代表團」”(20220302 총통,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초당적 고위급 대표단과 회견).



아시아

대만

남중국해 남사군도 타이핑다오(이투 아바) 활주로 확장 계획

대만은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있는 타이핑다오(太平島, 영어명 Itu Aba)에서 자군 전투기의 이착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활주로 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만 유력 일간지인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공군사령부는 2007년 완공한 남사군도 타이핑다오 내 활주로를 기존 1,150m에서 1,500m로 연장하는 공사를 올해 추진해, 유사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F-16 전투기의 착륙에는 약 1,000m, P-3C 대잠수함 공격기의 착륙에는 975m의 활주로는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대만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1,150m에 달하는 현 타이핑다오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가 연장되면 유사시 전투기의 이착륙이 한층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군용기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대만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림 16.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타이핑다오



그림 출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AMTI), "Itu Aba Island".

타이핑다오는 남중국해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만 본섬에서 약 1,600km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가오슝시 치진구(高雄市旗津區)에 속해 있다. 1946년 대만(중화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수복해 1950년대부터 대만 해군이 관할해 왔으며, 2000년부



아시아 대만

터는 해경(해순서 남사지휘부, 海巡署南沙指揮部)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또한 타이핑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미국·대만, 남중국해 군사시설 강화는 중국 대응 목적

미국은 대만이 타이핑다오에 해군을 주둔시키고,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오랫동안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자국의 정책과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는 자국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에 군사 시설 및 인공섬 건설을 적극화하자 이에 대응해 대만의 이번 활주로 확장 공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군사 시설 건설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강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중 최소 세 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3월 말 AP통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림 17. 남중국해 남사군도(스프레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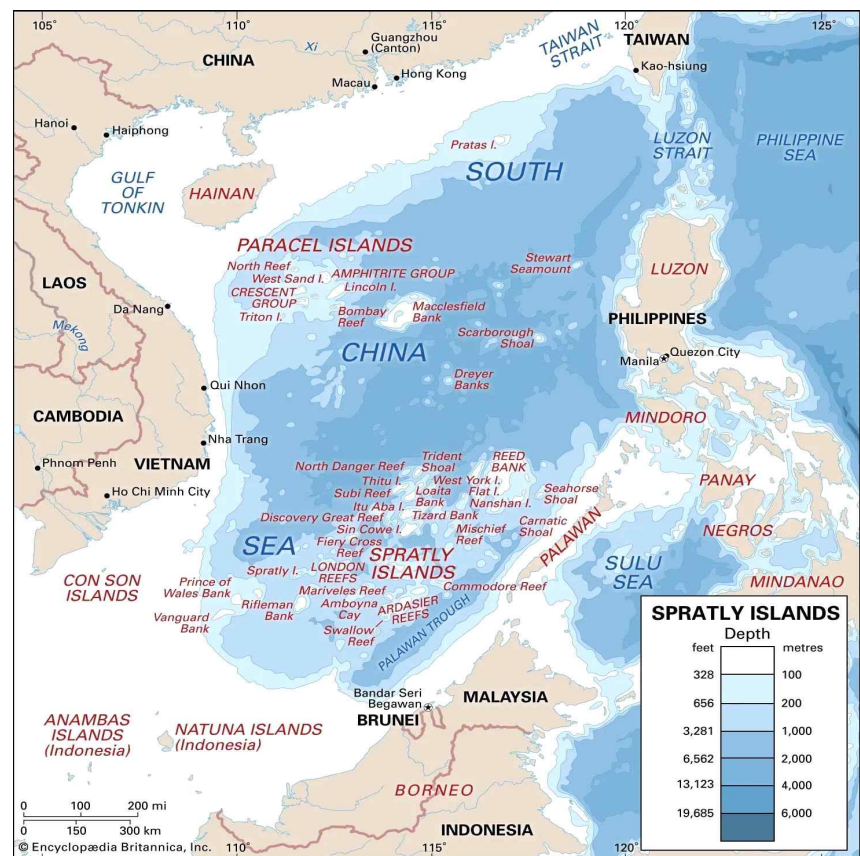


그림 출처: Britannica,
海洋委員會海巡署
(대만해양위원회해순서),
“歷史沿革(역사연혁)”.



아시아

대만

한편,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타이핑다오(이투아바)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상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의하면, 대만은 타이핑다오를 근거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출처 : 聯合新聞網(연합신문망), 2022년 4월 18일, "太平島跑道將延長 戰機可起降(타이핑다오 활주로 연장 전투기 이착륙 가능)".



아시아

베트남

전문연구원 이서희

베트남,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 요구

중국의 남중국해 어업 금지 조치와 베트남의 대응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해양 생물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의 통킹 만 일부와 파라셀(서사) 군도에 대해 일방적인 여름철 어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에도 역시 하계 금어기를 5월 1일~8월 16일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예고하였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다른 나라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주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과 갈등을 빚어 왔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의 여름철 어업 금지 조치가 파라셀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 침해이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및 2000년 양국이 합의한 통킹만 경계에 대한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베트남, 중국에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하지 말 것 요구

2022년 3-4월, 베트남은 중국 측량선 하이양 디지 8호가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 해안에서 158km 떨어진 곳에 다시 나타났음을 밝히면서, 중국에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2021년 7월 하이양 쓰지 8호와 호위함들이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과 뱅가드 은행 인근 베트남 대륙붕을 침범해 8월 7일까지 이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다. 그 배들은 8월 13일에 수역으로 돌아와 10월까지 머물렀다. 베트남은 이 선박과 호위대의 운항을 주권 침해라고 거듭 규탄하며 즉각 베트남 해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침범하지 않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지 말고, 남중국해의 평화·안보·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 : [1] 매일경제, 2022년 4월 3일, “남중국해서 금어기 일방 시행 중국에…베트남 “여기가 너희 바다냐” 황당”. [2] VINA, 2022년 4월 30일, “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일방적 어업금지 조치’ 비난…”주권 침해”. ; Viet Nam Union of Friendship Organizations, “Vietnam asks China to respect its sovereignty”. [3] VNEXPRESS, “Obey international laws, Vietnam insists as China transgresses again”.



아시아

싱가포르

전문연구원 이서희

유엔해양법협약 기반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강좌 개최

2022년 6월 6일-10일,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이 창설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1992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 외무부의 기술협력 이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개발 경험을 타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180개국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137, 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였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강좌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초점을 맞춘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수역 관련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것이다.

이 강좌는 해양법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 해양, 환경부서의 중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읽기와 쓰기에 능숙한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라이브 이러닝 세션('Live' e-learning sessions)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실시간 세션(live sessions)에서 질의응답 세션과 그룹 토론토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강좌의 66%를 참석해야 한다. 라이브 이러닝 세션은 매일 13:30에서 17:30(싱가포르 표준시, UTC/GMT +8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실시간 세션 시간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공지할 것이다.

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참가자는 강좌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라이브 이러닝 세션을 놓쳐선 안된다. 둘째, 참가자는 지명 기관 또는 정부, 싱가포르 정부와 임명 강사들이 규정한 강좌 관련 지침을 수행하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법과 해양법의 개요
- ② 해양경계획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 ③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방식
- ④ 해양과학조사
- ⑤ 유엔해양법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쟁점

출처 : Singapore Cooperation Program,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6 to 10 June 2022.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김소연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난 5월 12일과 13일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9개국 정상이 초대받았다. 이번 회의 개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며 미국의 전략적 최우선 순위가 인도-태평양에 있음을 확인하고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시대” 시작을 거론하며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의 중심성은 우리 정부 전략의 핵심”이라며 미국-아세안 파트너십은 중요하며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아세안의 해양협력 및 안보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대규모 지원 약속

미국은 아세안의 해양협력 및 안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교육 접근성 확대 등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 중 약 6,000만 달러는 해경 인력 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 파견, 해양범죄 방어 및 안보를 위한 해안경비대 아세안 해역 배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 불법조업과 강제노동 퇴치 등에 쓰이게 된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지지하고 역내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 국가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해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아세안 양 측은 정상회의 이후 경제적 유대강화, 해양협력 증진, 평화유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본 공동성명에서는 해양 영역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북아메리카 미국

아세안 주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보,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남중국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the South China Sea, COC)”의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 미국의 아세안 세력확장 시도 견제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전날 중국은,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역내 평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단결과 협력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이를 견제하면서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아세안은 우호·협력과 지역 안정 유지를 중시하며 제로섬 게임과 집단 대결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관망하는 아세안 국가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확고하게 미국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는 매우 지배적이나, 미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IPEF 참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나서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은 미국이 이번에 지원을 약속한 규모의 10배 수준인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미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지원 내용은 다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아메리카 미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작과 우리나라의 전략 마련 필요

이번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아세안 국가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반면, 아세안에서 약화되었던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회복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역내 주요국으로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해양협력 및 안보를 위한 지원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미국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우리나라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출처 : Reuters, 2022년 5월 13일, "With China in focus, Biden makes \$150 million commitment to ASEAN Leaders."



오세아니아

전문연구원 민영훈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과 오세아니아 대응

그림 18. 솔로몬제도와 오세아니아



그림 출처: 서울신문

중국 외교부가 지난 4월 19일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 체결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호주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과 주요국의 반응

이번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은 중국 군대가 솔로몬제도에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어, 오세아니아 지역의 전통적 강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이 협정이 중국의 군사기지 진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우터를 통해 이번 안보협정이 중국의 전형적인 패권 확장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¹⁾ 특히, 호주 외교부 장관 마리스 페인(MNarise Payne)은 호주가 지원하고 있는 솔로몬제도 주변 태평양 도서들의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1) 이 패턴은 먼저 어업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다음으로 자원관리, 개발원조, 마지막으로 안보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의 정책 접근법을 말한다.



오세아니아

아던(Jacinda Ardern)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솔로몬제도의 잠재적 군사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의 협정은 이미 지역 안보체가 구성된 태평양 도서국 안보에 필요치 않은 것이라 표현하였다. 반면, 솔로몬제도 총리 머내시 소가바레(Mannasseh Sogavare)는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19. 2019년 중국과 솔로몬제도 수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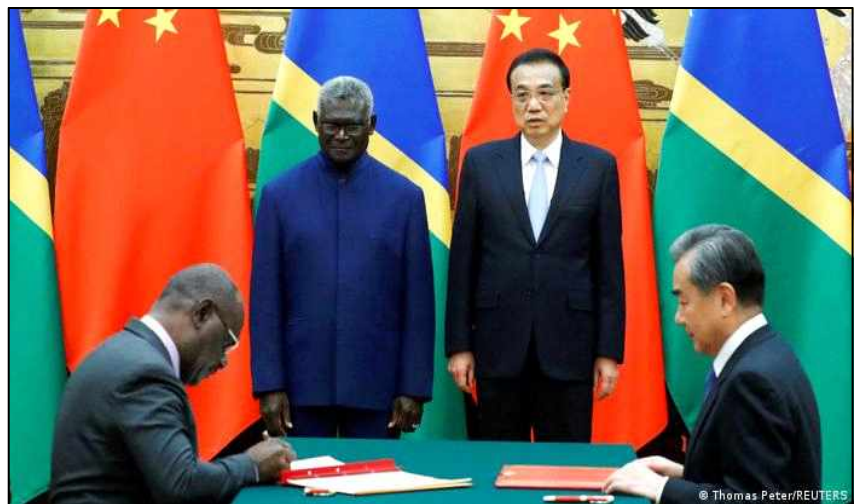


그림 출처: Reuters

솔로몬제도 지정학적 가치

솔로몬제도는 호주 동북쪽 약 2,000km 해역에 위치한 작은 도서국이다. 인구는 약 70만에 불과하며, 국토면적은 28,400km² 정도인데, 6개의 주요 섬과 9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솔로몬제도는 영국으로부터 1987년 독립한 이후 영연방 회원국으로 남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의 본격적인 원조 이전까지 주로 호주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다. 이는 솔로몬제도가 지정학적으로 미대륙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솔로몬제도 지원 확대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태평양 해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06년 이후 솔로몬제도를 포함한 남태평양 도서국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중국해를 통한 일대일로 실현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향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원조는 차관(借款)형식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오세아니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약소한 개발도상국이 한번 이러한 원조를 받게 되면 그 지원 규모와 채무 관계로 쉽게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2019년 솔로몬제도가 1983년부터 이어져 온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도 이러한 연유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체된 솔로몬제도 지원

호주와 뉴질랜드의 솔로몬제도 지원은 교육, 의료에 집중되어 있고 치안 유지를 위한 간접적 병력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현재까지도 친(親)대만 세력으로 인해 정치적 공세를 받고 있는 친(親)중국 성격의 소가바레 총리의 경우, 치안 또는 소요를 안정적으로 진압할 자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3년 구성된 솔로몬 지역지원단(RAMSI)을 지난 2017년 솔로몬제도에서 철수시켰다. 솔로몬지역지원단의 철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회불안 등에 대비하여 2017년 호주와 솔로몬제도가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소요 발생시 요청에 의해 호주의 경찰 또는 군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치안 유지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중국과의 안보협정은 솔로몬제도의 치안유지를 위한 소가바레 총리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중-솔로몬제도 안보협정과 중국군의 솔로몬제도 주둔 가능성

사실 호주에 주재하고 있는 솔로몬제도 고등판무관 로버트 시실로(Robert Sisilo)는 호주 국영 방송사인 A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안보협정이 중국 공안이 현지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체결된 것이며, 이번 협정이 중국군의 솔로몬제도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소가바레 총리가 중국과의 안보협정이 솔로몬제도의 중요한 안보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언급하면서, 안보협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아니아와 솔로몬제도 주변 해역에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호주 집권당 변화와 중-솔로몬제도 안보협정 대응전략

실제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과 솔로몬제도 양국 입장과 의회 연설문, 대변인 및 고위관계자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현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이 솔로몬제도가 2017년 호주와 체결한 안보협정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범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오세아니아

호주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안보협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국이 안보협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는 사실상 이 문구가 중국군이 솔로몬제도에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22년 5월 21일 연방의회 선거를 치른 호주는 당장 연방정부차원의 가시적인 대책을 단기간 내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 야당인 호주 노동당이 약 9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어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호주 연방정부 선거에 승리한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5월 24일 일본에서 개최하는 쿼드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 정상회의에 호주 신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쿼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호주는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을 포함하여 대중국 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솔로몬제도 안보협정 대응한 뉴질랜드의 연성파워 전략

뉴질랜드는 호주와 달리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을 계기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동맹인 파이프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지만,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소극적이라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안보협정을 계기로 태평양 주요국과의 안보연대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공통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 피지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2021~2024년 태평양 개발협력 자금을 과거에 비해 1억2천만에서 15억 뉴질랜드 달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솔로몬제도에 있는 참치 공장(뉴질랜드 일부 원조)의 일자리를 전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같은 뉴질랜드의 대중국 전략은 연성파워(Soft Power)에 무게를 둔 것으로, 뉴질랜드의 군사력이 파이프 아이즈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에 비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에 기인한다. 뉴질랜드는 태평양지역에 대한 자국의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안보 위협에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파이프아이즈도 뉴질랜드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세아니아

중국 외교부장 솔로몬제도와 태평양 8개국 방문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응정책에 비해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5월 26일부터 솔로몬제도를 시작으로 열흘 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8개국을 직접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문은 태평양도서국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태평양도서국의 중국시장 접근을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태평양도서국 중·고위급 경찰에 대한 훈련, 데이터정보와 사이버보안에 관한 협력을 문서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라우터는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 태평양도서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티모르 대통령 호세 라모스-호르타(Jose Ramos-Horta)는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완전한 실수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태평양도서국이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순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중국과 주요 서방국가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이 제안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등 약소국인 태평양도서국이 강대국 사이의 냉전에 희생양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왕이 중국 외교부장 솔로몬제도 도착



그림 출처: 한겨레



오세아니아

페니윙 호주 외교부장관의 피지 방문

호주는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태평양도서국 방문이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과 유사한 전략적 관계를 다른 태평양도서국들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호주는 최근 쿼드 회의에서 돌아온 페니윙(Penny Wong) 외교부 장관을 왕이 외교부장의 피지 방문 일정에 맞추어 5월 26일 목요일 피지에 방문토록 조치하였다. 페니윙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 시 이번 안보협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가장 큰 태평양 전략의 실패라고 정의하고, 앞으로 호주 외교에 있어서 태평양도서국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라 맹세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피지 방문시 페니윙은 지난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등한시켰다고 평가하고, 이번 호주 노동당 정부에서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 약속하였다. 지난 5월 21일 호주 집권당 교체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가시적인 전략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페니윙 외교부 장관의 피지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통해 태평양도서 지역에서 패권을 재확보하기 위한 호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ABC News, 2022년 5월 27일, "New Foreign Minister Penny Wong makes pitch to Pacific nations during visit to Fiji" [2] BBC(Tiffanie Turnbull), 2022년 5월 5일, "Australia defends Solomon Islands ties as row over China escalates" [3] Radio New Zealand, "Solomon Islands—a brief history" [4] Reuters(Kirsty Needham), 2022년 5월 25일, "China seeks Pacific islands policing, security cooperation—document" [5] Reuters(Kirsty Needham and Lucy Craymer), 2022년 4월 21일, "Solomon Islands says China security pact will not undermine peace" [6] Reuters(Lucy Craymer), 2022년 5월 17일, "Analysis: Alarmed by Solomon Islands-China pact, NZ finds its voice on security" [7] SBS News(Australian Federal Police), 2021년 12월 22일, "Australia's peacekeeping mission in Solomon Islands to be wound down" [8] Time(Amy Gunia), 2022년 4월 20일, "An Archipelago in the South Pacific Is Becoming the Newest Scene of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9] The Sydney Morning Herald(Eryk Bagshaw), 2022년 5월 25일, "Penny Wong and Wang Yi face off in Pacific as Beijing targets 10 nations" [10] TopDigital(김철), 2022년 4월 27일, "솔로몬제도 내 중국 군사기지 건설은 최후의 선" [11] 연합뉴스(신창용), 2022년 5월 2일, "솔로몬제도 '중공안 주둔하지만 '홍콩식 공권력' 행사 없을 것"



오세아니아

중국 정찰함, 호주 서쪽 해안 비밀 군사기지에 접근하여 정보 수집

호주 서쪽 해안에서 중국 고성능 정찰함의 첩보활동이 관찰되었다. 당시 호주 국방장관 피터 더턴(Petter Dutton)은 중국의 정찰함(Auxiliary General Intelligence, AGI)이 호주 해군의 비밀 통신 기지인 해롤드 E 홀트 해군 기지(Naval Communication Station Harold E. Holt) 인근 약 50해리까지 접근했으며, 호주군이 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서쪽 해안의 해군기지는 미국 등 동맹국들의 잠수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서부 엑스마우스(Exmouth)에 설치된 기지이다.

그림 21. 중국 정찰함의 항적



그림 출처: ABC News

중국 정찰함에 대한 호주 내각의 이중적 반응

피터 더턴은 이 정찰함의 의도가 호주 서부 해안의 정보 수집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며 중국 정찰함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피터 더턴은 비록 이 정찰함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 항해했지만, 고성능 정찰함의 이 같은 행위는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당시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피터 더턴의 침략행위 주장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다소 약한 표현으로 중국의 이 같은 행위가 결코 건설적이거나 우정을 위한 행위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라 하였다.



오세아니아

그림 22. 호주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정찰함



그림 출처: News1

중국군의 호주 도발

최근 호주 해안에서 중국 해군 함정의 출몰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찰함과 동일한 함정이 2021년 호주와 미국과의 해양 군사훈련에서 목격된 바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2월 호주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중국 함정을 감시하기 위해 호주 초계기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중국 해군이 비행하던 호주 초계기에 레이저를 겨냥하여 당시 호주 총리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였었다.

호주의 강경한 대중국전략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호주 정부의 최근 강경한 대중국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코로나 기원 조사, 석탄을 포함한 자원 무역 전쟁, 중국 정부의 호주 정치개입, 호주의 AUKUS(Australia, UK, US)²⁾ 구성 등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 정찰함의 헤롤드 E 홀트 해군 기지 접근이 5월 21일 치러진 호주 연방의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가 고의로 일으킨 행위라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에 당시 호주 국방장관인 피터 더턴은 중국 정찰함의 침범이 “이상한 타이밍”에 발생했다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호주 내무부 장관인 캐런 앤드류(Karen Andrews)는 중국 정찰함의 행위가 연방의회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사건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일축하였다.

2) 호주, 영국, 미국 3개국이 2021년 9월 15일 체결한 안보협정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지원을 위해 첨단기술과 정보공유를 실시하는 3자 외교안보 협의체이다.



오세아니아

호주 집권당 교체와 대중국 정책 변화

지난 5월 22일 새롭게 구성된 호주 정부는 대중국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호주의 제1 무역상대국이며 동시에 가장 큰 안보 위협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인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일본에서 개최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호주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새롭게 집권한 호주 노동당으로부터 쿼드와 AUKUS(호주, 영국 및 미국 동맹)에 대한 기여를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UKUS는 호주가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협의체로 향후 호주 해양안보전략에 가장 중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근시일 내 호주의 대중국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호주 정부 내각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출처 : [1] ABC News(Andrew Greene), 2022년 5월 13일,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Says a Chinese spy ship has been seen near secretive naval facility off Western Australia" [2] ABC News(Greg Barton), 2022년 5월 23일, "As Anthony Albanese heads to the Quad, what are the security challenges facing Australia's new government?" [3] Reuters, 2022년 5월 13일, "Australia says Chinese spy ship's presence off west coast 'concerning'" [4] 연합뉴스(윤고은), 2022년 5월 17일, "호주 해안서 포착된 중 정찰함, 미군함 정보수집 가능"



태평양도서국

전문연구원 민영훈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우려 성명서 제출

지난 4월 29일(금)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 행사가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분야에서 국가들이 따라야 할 포괄적 법적 틀임을 강조하고, 협약의 해석을 통해 다가오는 글로벌 해양과제에 대응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들 발언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가 국제법과 해양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로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플라스틱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 성안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고위급 행사에서 태평양도서국을 대표하여 태평양도서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에서 발언을 하였고, 파푸아뉴기니, 통가, 태평양소도서개발도상국(PSIDS, Pacific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피해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23. 사무엘 라로니 투발루 유엔상임대표 연설(태평양도서포럼(PIF) 대표)



그림 출처: Pacific Island Forum



태평양도서국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연설

먼저, 사무엘 라로니(Samuelu Laloni) 투발루 유엔상임대표는 태평양 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20세기 이후 가장 포괄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채택된 협약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이 대양의 가장 많은 해역을 관리하는 국가들로서 세계의 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수호자가 될 것과 해양의 법적 안전성, 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1985년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1985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2010년 태평양전망 체제 (2010 Framework for a Pacific Oceanscape), 청색 태평양 구상(Blue Pacific Narrative), 청색 태평양 영토를 위한 2050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이러한 계획들을 미래에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니는 기후변화로 인해 태평양도서국들이 현재 해수면 상승이라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채택한 “2021년 해수면 상승에 있어 해양수역 보존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eserving Maritime Zone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related Sea-level Rise)”과 유사한 지역적 또는 국가적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파푸아뉴기니 성명

다음으로, 파푸아뉴기니 유엔 상임 부대표 프레드 사루파(Fred Sarufa)는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 행사에 해수면 상승과 해양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관련하여 사루파는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채택한 “해수면상승에 있어 해양수역 보존에 관한 선언”을 강조하며, 해수면상승이 이미 수립된 해양수역에 대한 권리와 권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였다. 그리고 사루파는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diversity of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간 절차가 올해 8월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루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인류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양에서의 법적질서 유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태평양도서국

태평양소도서개발도상국(PSIDS) 성명

태평양소도서개발도상국(Pacific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PSIDS) 또한 이번 고위급 행사에서 성명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수역 조정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PSIDS는 해수면 상승과 같이 새로운 이슈들을 유엔해양법협약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면서, 해양에서의 형평과 안정을 가져오고 국제법 원칙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해기선과 기존에 확립된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PSIDS는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해양이 자신들의 터전임을 강조하고, 해양산성화,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불법어업 방지,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가 성명

마지막으로, 통가 유엔상임대표 빌리아미 뱅가 톤(Viliami Va'inga Tōnē)은 이번 고위급 행사의 성명서를 통해 태평양도서국 포럼, 파푸아뉴기니, PSIDS와 한 목소리로 해수면 상승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인정된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들 국가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평양도서국들은 이번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고위급 기념식을 통해 자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을 알리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해수면상승에 관한 문제는 태평양도서국에게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번 기념식에 제출된 태평양도서국들의 발언과 성명서는 향후 국제사회가 해수면 상승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 Abdulla Shahid, 2022년 4월 29일 “40th anniversary of the adopt of the UNCLOS” [2] Pacific Island Forum, 2022년 4월 29일 “Remark: PIF Statement at UNGA High Level Event marking 40th anniversary of UNCLOS” [3] PNG, 2022년 4월 29일 “Country Statement-Papua New Guinea to UNGA” [4] PSIDS, 2022년 5월 24일 “PSIDS statement to UNGA”, 29 April 2022 [5] Tonga, 2022년 4월 29일 “Country Statement-Tonga to UNGA”.



아프리카

전문연구원 김민

기니만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전년에 비해 감소세 보여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산하 국제해사국의 2022년 1분기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기니만 해적 사건³⁾이 공식적으로 3건 보고되어 전년 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전 세계 해적 발생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37건(2021년 38건)이나 기니만 해적 발생 건수는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 해협은 2021년 6건에서 2022년 11건으로 상승하여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발생이 가장 높은 국가로 등극했다.

2020년 국제해사국 보고서 기준, 전체 해적 사건으로 인한 선원납치 피해(총 135명)의 약 96%(130명)가 기니만이 포함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기니만은 소말리아 이후 새로운 해적 발호지가 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기니만 해적은 외국 선박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어업으로 인한 국내 어선의 피해,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등장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니만 해적 퇴치를 위하여 G7 국가가 주축이 되어 기니만 해적퇴치 그룹을 창설하고 해적 진압에 나선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가나 정부와 기니만 안보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마련 및 한-EU 안보·국방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아프리카 인근 해역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기니만 해적 감소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해적 근절을 위한 각 국가와 국제기구 노력의 결실로 판단된다.

출처 :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CC IMB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 – First Quarter 2022".

3) 여기서 기니만 국가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카메룬, 적도기니, 가봉, 콩고민주공화국을 말함



지난 달 행사

제45회 해양법정책연례컨퍼런스 | 3월 16일(수) ~ 18일(금) /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온라인)
Annual Conference on Oceans Law and Policy

• 주관 미국 해군대학 Stockton 국제법센터,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 세계해사대학, KMI



• 주제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평가와 전망

• 내용 총 8개 세션과 5명의 기조강연으로 구성

- 1세션: 개회
- 2세션: IUU 어업의 위협 극복
- 3세션: 대륙붕의 이용과 주장
- 4세션: 기후변화, BBNJ 및 신기술
- 5세션: COVID-19 팬데믹과 유엔해양법협약
- 6세션: 해양법 역량강화: 이슈와 경험
- 7세션: 지역분쟁에 있어서 비대칭 안보 문제
- 8세션: 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 특징 신진학자들이 발표자로 대거 참가하고, 과거의 유럽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함으로써 지역별 다양성이 강화되었음

알렉산더 쿠싱 국제법컨퍼런스 | 5월 16일(월) ~ 18일(수) / 미국 로드아일랜드 해군대학
Alexander C. Cushing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 주관 미 해군대학 Stockton 국제법센터

• 주제 국제법과 해양 갈등(International Law & Conflict at Sea)

• 내용 총 11개 세션과 4명의 기조강연으로 구성, 해양안보 및 국제법적 문제들에 대해 토론

- 1세션: 소개 및 개회식
- 제2세션: 해양에서 파괴적 과학기술
- 제3세션: 작전법에 관한 함대의 시각
- 제4세션: 중국과의 해상 접촉
- 제5세션: 해상법 집행
- 제6세션: IUU 어업
- 제7세션: 러시아와 지역 해상안보
- 제8세션: 해상원정 작전과 국제법
- 제9세션: 해상안전(보)법과 일본: 센카쿠열도, 동중국해 및 대만
- 제10세션: 해상안전(보)법과 한국: 해양경계 (*기조강연으로만 구성)
- 제11세션: 인도태평양 해상안보 도전

• 특징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서 모두 참가하여 작전 경험을 발표함으로써 현장감이 있었으며, 폴란드, 필리핀, 일본 등 각국의 해양안보 및 국제법 전문가들이 다수 참가하여 각국의 경험과 문제를 공유하였음



3개월 내 행사계획

제22차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 | 6월 6일(월) ~ 10일(금) / 미국 뉴욕 유엔본부

- **주요 내용** 연례 개최되는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로서 제22차 회의에서는 “해양 관측”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가 간 논의 예정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 6월 13일(월) ~ 17일(금) / 미국 뉴욕 유엔본부

- **주요 내용** 매년 개최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간 회의로, 이번에는 21명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예정

국제수산물법 컨퍼런스 | 6월 23일(목) ~ 24일(금) / 덴마크 패로제도대학교
International Fisheries Law Conference

- **주관 및 주최** 주관: 패로제도대학교,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 **주제** Persistent and Emerging Challenges in International Fisheries Law
- **안내 및 등록** <https://www.faroeislandsfisherieslawconference2022.com/>

유엔 해양 컨퍼런스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 포르투갈 리스본
UN Ocean Conference

- **주관** 케냐, 포르투갈
- **주요 내용**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14번(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포괄적 논의
- **안내** <https://www.un.org/en/conferences/ocean2022>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학술회의: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질서의 변화 |
7월 1일(금) ~ 2일(토) / 웨스틴 조선 부산 오키드룸

-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국제법연구원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국제법평론회

국제해양법학회



한국해로연구회
The SLOC STUDY GROUP-KOREA

- **주요 내용**
 - 1세션: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40년의 성과와 과제 - KMI 주관
 - 2세션: 해양패권 경쟁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 - 한국해로연구회 주관
 - 3세션: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 과제 - 서울국제법연구원 주관
 - 4세션: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
 - 5세션: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갈등과 대응방향 - 국제법평론회 주관
 - 6세션: 해양환경 위기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대응
- **안내** 유튜브 생중계, 현장 참석시 사전등록 필요(사무국: secretariat@connectus.pro)



3개월 내 행사계획

국제해저기구 제27차 세션 법률기술위원회 회의 I

7월 4일(월) ~ 15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심해저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 심해저 광업규칙의 제정 검토 등 수행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7월 I 18(월) ~ 29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예산, 심해저 개발에 관한 규칙 승인, 심해저 개발 계약자 활동 검토, 법률기술위원회 보고서 논의 등

국제해저기구 총회 I 8월 1일(월) ~ 5일(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전략계획과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 안건 승인